

정기국회 첫날부터 ‘청문회 격돌’… 김승원·용혜인 쟁점 부상

민주당, 추석 전 청문회 완료 계획
국힘, 김승원 지명 철회 0순위 꼽아
대통령 재판 관련 이해충돌 우려 제기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9월 중에 치러질 인사청문회를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 입각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는 추석 전까지 이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완료해 국정이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8월31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별도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금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인사청문 요청안에 제출될 예정이라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될 예정인데, 추석 전에는 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에서 “김 의원은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 왔다”고 했다. 이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쌍방을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공소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된다’라고 답했던 인물”이라며 “‘공취모’, 즉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1명”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전력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멘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부 내각에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입각시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원직을 후순위에게 승계한다는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용혜인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의석수가 1석인)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견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 내정은 이재명 정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이재명식 기만전술”이라며 “실제 용 후보자에게 여론의 포

화가 쏟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의 변호인단이었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시도가 강행되면 결국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공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 대통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두 사람의 인선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무부는 물론이고, 지금처럼 경제와 부동산이 어려운 때에 재경부와 국토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의 장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부처를 이끄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명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두 차례 총선에서 민주 진영 비례 위성 정당에서 출마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해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를 두고 “지금까지 용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 눈치가 빠르다는 것으로 여당과 각을 세워야 하는 문제에는 늘 여당과 결을 같이 했다”며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정부와 맞서 자기 소신을 지키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이번 인사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여야 정책위의장단 첫 회동

공동 공약부터 합의 처리

쟁점 법안, 치열하게 속의
세제·노란봉투법 주요 현안

여야 정책위의장단이 1일 정기국회 첫날 상견례를 갖고 각 정당에서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당시 공동으로 추진했던 공약을 찾아 신속히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견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선 속의를 거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병덕·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희승·허성무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국민의힘의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수영·김미애·김은혜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 등을 논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단은 2주 후인 9월15일 조찬 모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공동 공약을 추려낼 예정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양당 공약 중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은 모아서 빨리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쟁점 있는 법안들도 연석회의에서 모여서 속의 과정을 거쳐 될 수 있으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거친다는데 이견 없이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아마도 세계개편안이 견이 제일 클 것”이라며 “그 점에서 양당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듯”이라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여당으로서도 좀 더 큰 틀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를 많이 듣고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의 모두발언에서도 양당 정책위 의장단이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를 민생 회복에 두자고 입을 모았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대전환이 진행되는 지금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만큼, 오늘 이 자리를 그 출발점으로 만들어가자”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저출생, 기후위기, 국민 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있는 사안들은 치열하고 허심탄화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했다.

/박태홍 기자



영양군
YEONGYANG-GUN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05
영양 자작나무숲